

## 제4차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회의록

### 1. 회의 개요

- 일시 및 장소 : '17.12.15(금), 10:00~12:30, 중앙우체국 21층 회의장
- 내 용 : 단말기 자급제 관련 논의결과 정리
- 출 석 : 위원 18인

※ 이대 김상택 교수, 전남대 황인태 교수 불참

### 2. 주요 내용

#### ① 완전자급제 관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결과 정리

##### 〈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 및 우려사항 〉

- (참여연대, 한국소비자연맹, 변정욱 교수)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,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사항이 존재함을 논의 결과에 명시함이 바람직

##### 〈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 〉

- (소비자시민모임, 참여연대, 정부) 단말 종류·가격·출시시점 등 자급 단말과 이통사향 단말 간 차이 해소를 제조사에 요청하며, 이통사도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
- (삼성전자) 이전에는 자급 단말을 출시하지 않았던 플래그쉽 모델에 대해 자급 단말을 출시하고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, 이통사향과의 차이(가격 및 출시시기 등)도 해소해 나갈 계획
- (소비자시민모임, 한국소비자연맹, 정부) 이통사 차원의 조치로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 출시, 온라인 가입자 혜택 확대 등 제안이 나온 바 있음

- (이통3사) LG유플러스는 이미 시행 중이며, SK텔레콤과 KT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다는 입장
- (알뜰폰협회)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유심요금제 출시 등 가입자 혜택 확대에는 공감하나, 알뜰폰은 유심요금제를 이미 출시하고 있어 알뜰폰 차원에서는 오히려 경쟁력 악화가 우려됨
- o (위원장) 단말기 출고가 인하, 외국산 단말기 수입 관련 인증 개선, 분리 공시제 도입·시행,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
- (LGU+) VoLTE 기능 탑재 의무 완화에 대한 요구도 있었으나 이는 자급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아 동의하지 않음
- (KT) 분리공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원금·장려금 비율 규제 및 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
- o (유통협회) 협회 차원에서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 상향을 제시한 바 있고, 장려금 상한제 및 위약금 상한제 도입에도 긍정적인임

#### <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 도입 시 보완사항 >

- o (참여연대, 정부) 최소한 현재의 이용자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25% 수준의 요금할인 및 할부 구매 등의 유지가 필요하며, 요금경쟁 담보 방안, 자급제 단말 출시 의무화 필요성 등이 제기된 바 있음
- o (이통3사) 완전자급제 법률 시행으로 유통망이 구조 조정되는 경우, 유통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음
- 단말기와 서비스 판매를 연계하는 등의 불법행위와 편법적인 경품 경쟁 등의 행위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 등을 언급할 필요

## ② 보편요금제 관련 설명

- 정부는 보편요금제 추진배경 및 도입 필요성, 주요 내용,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

## ③ 차기회의 논의사항 및 일정

- 12월 22일(금) 오후 2시에 보편요금제 도입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, 보편요금제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논의기로 함